

KMI 동향분석

VOL.108
2019 FEBRUARY

발간년월 2019년 2월(통권 제108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홍현표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국민횃감 광어”, 소비 다변화 등 생존전략 마련해야

백은영 양식관측팀장
(eybaek@kmi.re.kr/051-797-4503)
하혜수 관측기획팀 전문연구원
(hyesoo8712@kmi.re.kr/051-797-4511)
김남호 양식관측팀 연구원
(nhkim@kmi.re.kr/051-797-4518)
김대영 수산업관측센터장
(mobydick@kmi.re.kr/051-797-4541)

어류 양식의 선두 주자인 광어는 국내 주력 양식품목으로서 ‘국민횃감’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2019년 1월 광어 산지가격의 실질가격은 kg당 7,647원으로 10년 전 대비 21.6%나 하락했고, 명목가격 또한 8,600원으로 생산비(9,739원/kg)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와 같이 생산비를 밑도는 광어 산지가격이 형성된 경우는 지난 10년 사이 세 차례(2008년, 2014년, 2018년)나 있었다. 3개년 모두 가격 하락 원인은 공급 과잉에서 비롯되었다. 1.0kg 이상 크기의 광어 출하가능물량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세 경우 모두 전년보다 80% 이상 많아지면서 2008년 산지가격은 2007년 대비 17.5%, 2014년과 2018년에는 각각 24.2%, 12.0%씩 하락했다. 그러나 출하가능물량이 급증한 원인은 각각 상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의 경우 광어 양성물량(12월 말 기준)은 전년 대비 2.9%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1.0kg 이상 크기의 출하가능물량이 급증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인 리먼브러더스 사태 등으로 광어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14년의 경우 양성물량이 전년 대비 22.8%나 늘어나 공급 과잉의 원인으로, 1.0kg 이상 크기의 출하가능물량 역시 83.2%나 증가했다.

2018년에는 양성물량이 전년 대비 4.0% 증가에 그쳤지만, 1.0kg 이상 크기의 출하가능물량은 2배 이상 급증했다. 횃감용 총 어류 공급량도 12만 4,032톤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했지만, 광어 공급 비중은 오히려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28.3%였다. 이는 횃감 대체어종인 ‘연어’와 ‘방어’ 수입량이 크게 늘면서 1.0kg 이상 크기의 광어 출하가능물량이 적체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의 경우 광어는 월평균 3,700톤 내외로 전체 공급량의 50~60%를 차지했으나, 2018년에는 광어의 월평균 점유율은 30~40%로 낮아졌다. 반면 연어 월평균 공급량은 10년 전 대비 3배 증가한 3,636톤이었으며, 점유율 또한 대부분 월에서 50%대를 기록했다. 방어 역시 2008년에는 겨울철(10월~2월) 월평균 점유율이 4~5%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 15%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2018년 광어 가격 하락은 공급 과잉과 더불어 소비 패턴 다양화에 따른 광어 수요 감소에 기인된 것으로 그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활어로 먹는 광어보다 선어 형태로 소비되는 ‘연어’, ‘방어’가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유통시장의 소비트렌드가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침체된 광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결국 광어가 최종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생존전략을 찾아 나서야 할 때이다.

첫째, 생산비 절감형 양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생산비를 밀도는 산지가격 형성이 찾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식경영의 불안정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광어 양식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량 종자 개발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며, 현재 고비용의 생산구조를 체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스마트양식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년부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양식에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둘째,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최근 광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2년 배합사료 의무화 등 안전한 광어 생산을 위한 기준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생산자의 자발적인 참여 또한 전제되어야 한다. 본 제도가 정착되면 소비자 신뢰성 확보 및 안전성 문제 완화에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소비측면에서는 ‘활어’에서 탈피한 시장 세분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광어를 유통용 활어로 주로 소비했으나 현재와 같은 소비패턴으로는 광어시장이 축소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고가의 대(大)광어 프리미엄 시장 고수와 동시에 광어의 참맛을 널리 알림으로써 두터운 소비층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고비용의 생산시스템으로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광어양식의 경영비 절감 방안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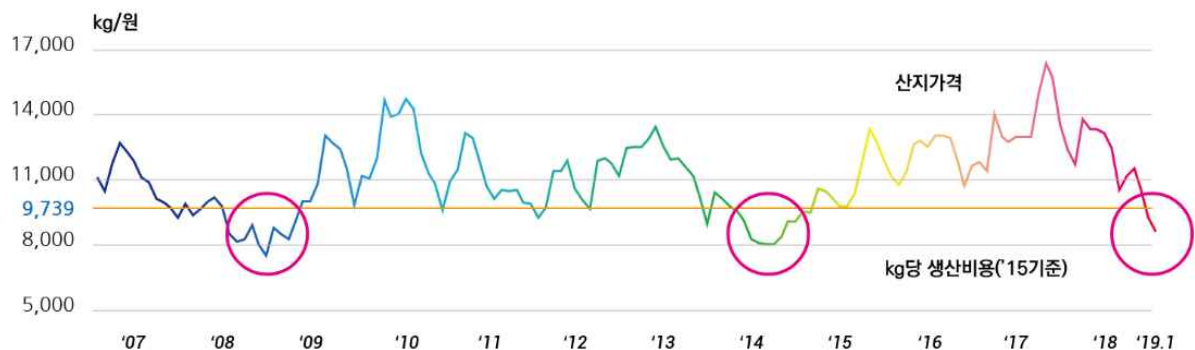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다양한 제품개발 및 맞춤형 홍보전략 마련이다. 광어는 보통 4인 기준의 ‘광어 한 마리’로 소비되는 경향이 많지만, 이제는 1인 가구 수 증가에 맞춘 1인용 포장회, 회덮밥, 초밥, 물회 등 다양한 아이템 발굴이 중요하다. 또한 스마트 시대에 맞춰 홍보 방법의 다변화(SNS, 드라마, TV 프로그램 내 PPL)를 통해 ‘광어 알리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주산지의 장점을 살린 지역마케팅 강화를 통해 광어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광어 산지가격, 최근 10년 사이 생산비 이하 세 차례 형성

■ 광어 산지가격, 생산비보다 낮은 kg당 8,600원으로 하락

- 2000년대 들어 광어 산지가격의 변동 주기가 잦아지고 있으며, 게다가 광어 생산비¹⁾를 밑도는 산지가격이 최근 10년 사이 세 차례나(2008년, 2014년, 2018년) 형성되었음
- 2019년 1월 광어 산지가격은 kg당 8,600원으로 2008년 동월 가격인 7,500원보다 높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가격을 살펴보면 2019년 1월 산지가격은 7,647원으로 2008년(9,754원)보다 21.6% 하락했다고 볼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이러한 산지가격의 하락은 양식어가 소득뿐만 아니라 어가경영을 어렵게 가중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실제로 상당수 양식어가²⁾가 감소하여 2017년 기준 광어 양식어가는 531 곳이었음. 이는 2008년 대비 17.2% 줄어든 것으로 최근 10년 내 가장 적은 어가수임

그림 1. 연도별 광어 산지가격 추이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광어 산지가격, 상승보다 하락 시 변동폭 더 크게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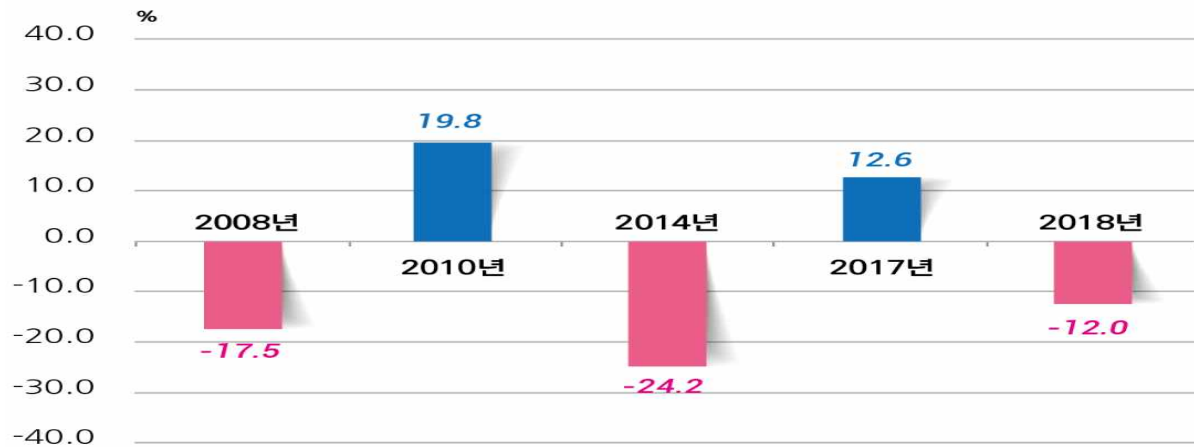
- 광어 산지가격 상승은 어가경영에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할 경우 계획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광어 가격등락은 양식어가 소득과 직결되며, 특히 가격 하락은 생산원가 비중을 상승시켜, 광어 양식경영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가격 안정은 계획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 요소임

1) 양식어업 경영조사 결과(2015년)에 따르면, 광어 생산비는 kg당 9,739원(100m)으로 나타났음. 이 중 사료비 비중은 전체의 40.2%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반해 순이익은 11.6%에 그쳤음

2) 해럴드경제(2017. 3. 30)에 따르면 소규모 양식어가들이 경쟁력 약화로 어장을 합병하거나 경영주의 고령화에 따른 휴·폐업이 늘어났음

- 광어 산지가격의 변동폭을 전년과 비교해 보면, 상승의 경우에는 2010년과 2017년 각각 19.8%, 12.6% 높았음. 그러나 2008년에는 전년 대비 17.5% 하락했으며, 2014년에는 이보다 훨씬 하락 폭이 큰 24.2%였음.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12.0% 하락했음

그림 2. 연도별 광어 산지가격 변동폭 추이



주 : 평균 산지가격은 광어 1.0kg 크기의 제주산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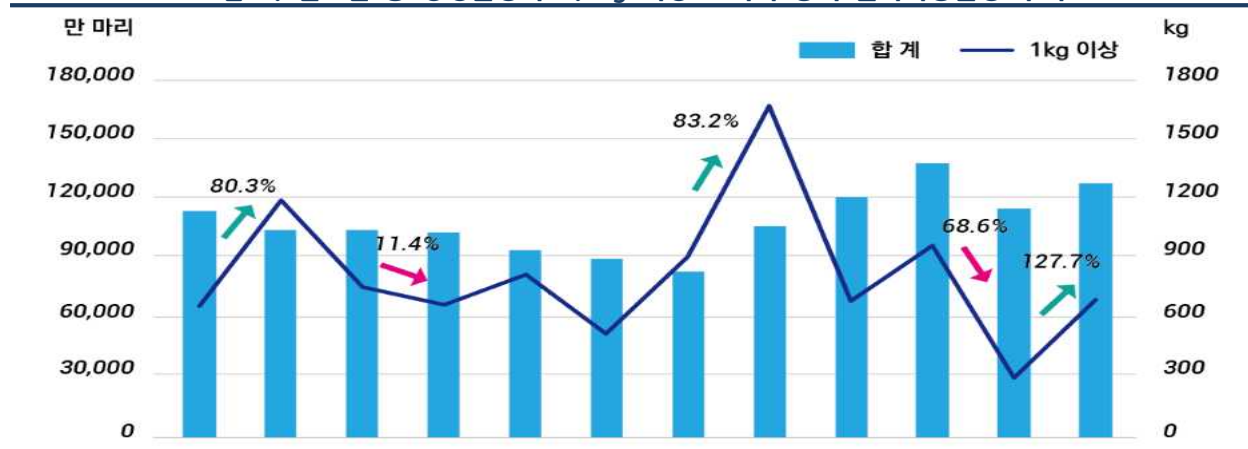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가격 하락, 1.0kg 이상 출하가능물량과 대체 어종 수입 증가

■ 지난 10년 사이 출하가능물량(1.0kg ↑), 전년보다 80% 이상 시 모두 가격 하락

- 지난 10년 사이 1.0kg 크기의 광어 출하가능물량은 전년 대비 80% 이상(2008년, 2014년, 2018년)일 경우 모두 산지가격이 폭락했음

그림 3. 연도별 총 양성물량과 1.0kg 이상 크기의 광어 출하가능물량 추이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특히 2018년의 경우 1.0kg 크기의 광어 출하가능물량은 690만 마리로 가격이 하락했던 2008년과 2014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나, 양성물량 증가폭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가장 컸음

■ 가격 변동, 치어 수급불균형과 외부적인 영향 크게 작용

- 광어 산지가격이 상승한 2010년과 2017년에는 양성량과 출하가능물량(1.0kg 이상 크기)이 전년 대비 적었는데, 이는 치어 수급문제로 치어 공급이 원활치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음
- 이에 반해 가격이 하락한 2008년에는 출하가능물량이 전년보다 80.3% 많은 1,190만 마리였음. 2006년 봄에 입식된 치어의 대량 폐사로 대량 입식이 이루어졌고, 백신 보급 등으로 폐사 또한 줄었음. 한편 세계 금융위기인 리먼브러더스 사태 발생으로 광어 소비도 다소 위축되었음

표 1. 광어 산지가격 변동 요인

(단위 : 만 마리)

구 분	2008년(A)	2010년	2014년	2017년	2018년
내 부	- 양성물량↑ 대량 입식 백신 보급 → 폐사 감소	- 출하·양성량 ↓ 1.0kg 이상 양성량 16%↓	- 양성물량 ↑ 수면적 증가 - 식품안전성 쿠도아충 발생	- 출하량 ↓	-양성·출하가능물량 ↑ 치어 폐사↓ - 식품안전성 수은 관련
출하가능물량 (전년대비)	1,190 (80.3%↑)	667 (11.4%↓)	1,660 (83.2%↑)	303 (68.6%↓)	690 (127.7%↑)
외 부	- 금융위기 리먼브러더스		- 일본 방사능 - 세월호		- 대체어종↑ - 지방선거 - 폭염 - 미세먼지

주 : 1) 파란색은 가격 하락, 빨간색은 가격 상승한 연도임

2) 출하가능물량은 1.0kg 이상 크기를 대상으로 한 것임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2014년에는 주 산지인 제주지역의 사육수 면적이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었고, 1.0kg 이상 크기의 양성물량 역시 83.2% 많은 1,660만 마리였음
- 또한 2014년 2월에는 식품안전성 문제(쿠도아충 관련 보도) 등이 발생했음. 이 외에 7월에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2014년 1월 여수지역 기름 유출 사건, 그리고 4월 세월호 사건까지 발생해 호재보다 많은 악재로 내수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었음
- 한편 2018년에는 상대적으로 자연 재해 피해가 적었고, 치어 폐사도 개선되면서 양성물량은 전년 대비 11.0%, 출하가능물량(1.0kg 이상 크기) 역시 2배 이상 많았음
- 또한 과거보다 대체어종 공급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광어 수요는 줄었고, 선거, 폭염, 미세먼지 발생, 청탁금지법 시행³⁾과 더불어 최근 국내 경기 침체 등으로 외식소비가 줄면서 활어에 특화된 광어회 소비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3) 해양수산부(2017),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수산물 판매동향 조사에 따르면 수산음식점업의 매출이 감소했으며, 이는 수산물 식재료 구입 감소로 이어졌음

그림 4. 광어 가격 하락 요인 타임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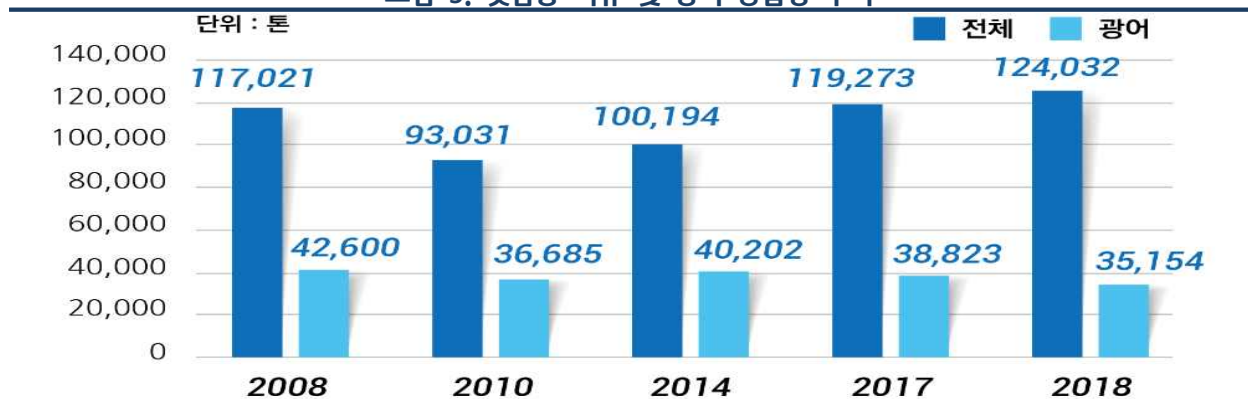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2018년 횃감용 총 어류 공급량, 10년 전보다 오히려 6% 늘어

- 횃감용 어류의 총 공급량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12만 4,032톤으로 광어가격이 하락했던 2008년 및 2014년 대비 각각 6.0%, 23.8% 늘었음. 이는 국내 양식 어류의 생산 증가보다 자연산 및 수입산 대체어종의 공급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임
- 광어 공급량은 2008년부터 증감을 반복했으며, 2018년에는 3만 5,154톤으로 10년 전 대비 17.5% 감소했음. 횃감용 총 어류 공급량 중 광어의 비중은 2018년에 28.3%로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였음. 이는 결국 과거보다 광어 수요가 많지 않음을 나타냄

그림 5. 횃감용 어류 및 광어 공급량 추이



주 : 공급량 대상 어종은 넙치류, 조피볼락, 송어류, 돔류, 농어류, 가자미류, 쥐치류, 능성어, 방어류, 민어, 연어의 총 합이며, 이 중 광어는 국내 생산량+수입량-수출량 수치임

자료 : 통계청, KMI 수산업관측센터

■ 어류 수입량, 광어 생산량보다 많은 3만 8,000톤

- 2018년 횃감용 어류 수입량은 국내 광어 생산량(3만 6,494톤)보다 4.8% 많은 3만 8,251톤이었음. 어종별로 살펴보면 연어는 지난 2008년 대비 10배 가까이 늘어난 2만 4,058톤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여기에 냉동과 기타 연어제품을 더할 경우 수입량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음

- 다음으로 방어 수입량은 1,574톤으로 국내 자연산 방어 생산량의 약 20%에 해당하며, 2008년 대비 6배, 2014년 대비 10배 가까이 늘었음. 최근 일본 양식산 수입어류의 검역⁴⁾이 완화되면서 과거보다 수입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임
- 민어 수입량 역시 2008년 대비 9.1%, 2014년 대비 60.6% 늘어난 4,595톤이었으며, 돔류와 농어 수입량도 각각 4,000톤 내외를 차지했음. 앞으로 횃감용 어류는 수입 여건과 국내 수요가 늘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이 수입될 여지가 큰 만큼, 광어 소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표 2. 횃감용 어류 수입 동향

(단위 : 톤, %)

구분	2008년(A)	2010년	2014년(B)	2017년	2018년(C)	증감률	
						C/A	C/B
합계	20,035	15,488	17,228	30,883	38,251	90.9	122.0
돔류	7,157	4,464	2,957	2,983	4,023	-43.8	36.1
농어	5,953	6,313	4,437	3,724	4,001	-32.8	-9.8
민어	4,212	2,306	2,861	4,262	4,595	9.1	60.6
방어	246	6	163	748	1,574	538.7	867.8
연어	2,465	2,400	6,811	19,166	24,058	875.8	253.2

주 : 연어는 신선냉장 및 필렛을 합한 수치이며, 그 외 어종은 활어를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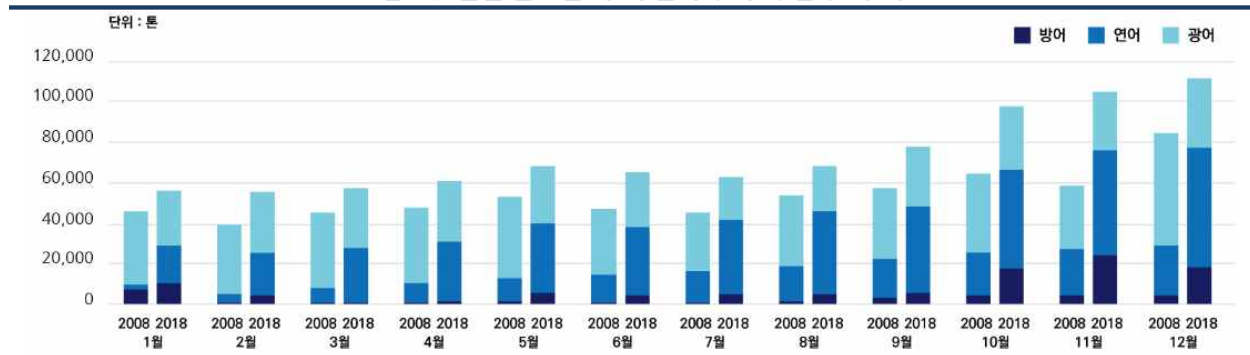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수입 어류에게 자리 내준 ‘국민횃감’ 광어

- 광어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연어·방어 횃감용 어류의 공급량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의 경우 광어는 월평균에서 평균 3,700톤 내외로 전체 공급량의 50~60%를 차지했음. 한편 연어는 광어의 절반 미만인 1,419톤이었으며, 방어는 이보다 훨씬 적은 266톤에 불과했음
- 이에 반해 2018년 광어 월평균 점유율은 30~40%로 낮아졌으며, 공급량도 10년 전 대비 24.6% 감소한 2,786톤이었음. 반면 연어 월평균 공급량은 10년 전 대비 3배 증가한 3,636톤이었으며, 점유율 또한 대부분 월에서 50%대를 기록했음. 방어 역시 2008년 대비 크게 늘어난 852톤이었으며, 특히 겨울철(10월~2월) 평균 점유율도 15% 이상을 차지했음

4) 2018년 1월부터 일본산 양식어류에 대한 정밀검사 비율(100%→50%)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후 3월 제도 개선(일본에서 VHS정밀검사 검역증 발급협의 완료)으로 4월부터 4%로 재조정됨. 이에 따라 기존 정밀검사 시 5일 소요되던 것이 현재 1~2일로 단축됨

그림 6. 월별·연도별 광어·연어·방어 공급량 추이



주 : 방어류는 수입량+국내 생산량, 연어는 신선·냉장(필렛 포함) 수입량, 광어는 국내 생산량+수입량-수출량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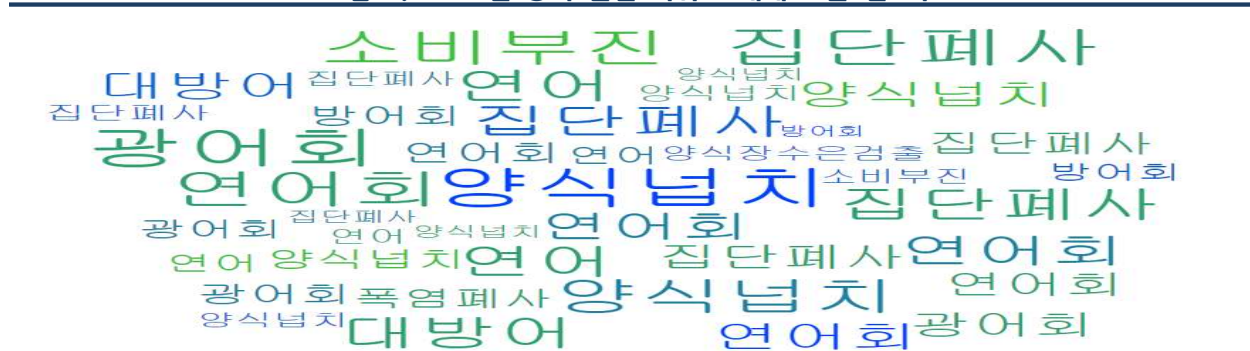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관세청

소비자 선호도, 광어보다 ‘방어’와 ‘연어’에서 더 높아

■ 광어 현주소, ‘긍정’보다 ‘부정’ 이슈 더 많아

- 2018년 광어 관련 키워드 매출 노출 빈도수를 살펴보면, ‘폐사’, ‘폭염’, ‘수은’, ‘소비 부진’ 등 부정적인 이슈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체어종으로 꼽히는 ‘연어회’, ‘대방어’, ‘방어회’ 등의 검색도 많았음

그림 7. 2018년 광어 관련 키워드 매체 노출 빈도수



주 : 1) 본 그래프는 네이버 뉴스 검색 노출 횟수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임

2) 검색기간은 2018.1.1~2018.12.3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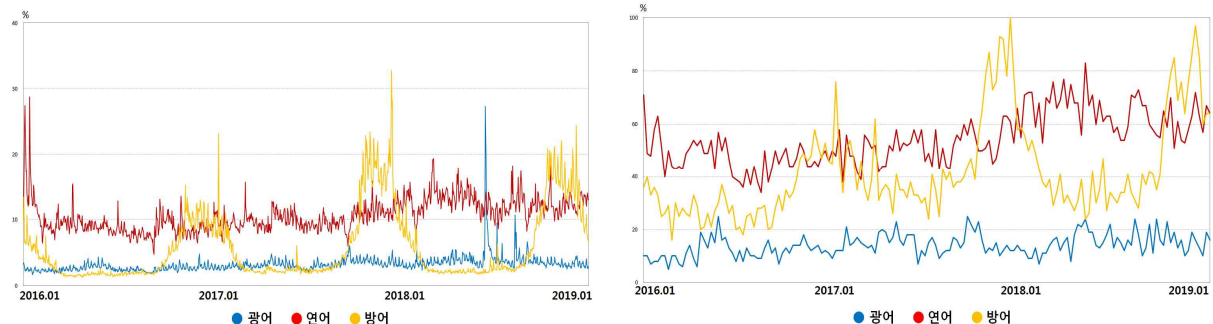
자료 : 네이버(www.naver.com)

■ 국내 소비자 선호도, 광어보다 ‘방어’와 ‘연어’에서 더 높아

- 최근 횃감용 어류의 수입 증가는 국내 횃감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음. 국내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구글의 ‘방어’, ‘연어’, ‘광어’ 관련 트렌드 빈도를 지수화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어’의 경우 매년 겨울철 다른 어류에 비해 트렌드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계절 어류로 자리 매김한 것으로 보임

그림 8. 광어 및 대체어종 검색 트렌드 지수(네이버, 구글)



주 : 1) 본 그래프는 네이버 트렌드, 구글 트렌드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임

2) 광어, 연어, 방어의 트렌드 빈도를 합산하여 기간 내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한 상대적 지표임

자료 : 네이버(www.naver.com), 구글(www.google.com)

- 연어는 연중 트렌드 지수가 높아 광어우럭 다음으로 횃감시장의 대표 어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반해 광어는 국내 횃감용 어류 중 가장 많이 생산되며, 비교적 소비자 선호도는 높지만 광어의 트렌드 지수는 ‘연어’, ‘방어’보다 낮았음

■ 기존 소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광어

- 수입산 횃감의 시장 점유율은 과거보다 늘고 있으며, 소비행태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음. 그러나 광어는 여전히 기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광어는 주로 일반 횃집에서 ‘회’ 형태로 대부분 소비되고 있음
- 전국의 횃집 수는 약 1만 4천 개⁵⁾로 추정되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어종도 판매되고 있지만 대부분 광어를 취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광어⁶⁾ 소비가 줄고 있는 점은 연어와는 상당히 대조적임
- 최근 5년 사이 연어전문점은 330개(2018년)까지 급증했으며, 이 수치는 일반 횃집보다 매우 적음. 그러나 전문점에서는 ‘연어’ 단일 어종만을 판매하며, 광어 생산보다 많은 연간 약 4만 톤(2018년)⁷⁾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음. 연어 소비는 향후에도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5) 이남수 외(2017), 「국민 횃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KMI 동향 분석 vol 51에서 인용

6) 광어·우럭전문점(2018년 기준)도 있지만, 연어전문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각각 156개, 128개에 불과했음

7) 2018년 연어 총 수입량(신선·냉장, 냉동, 필렛, 훈제)은 3만 7,432톤이었음

그림 9. 광어(좌) 회와 연어(우) 샐러드·화·스테이크 사진



자료 : 네이버(www.naver.com), 검색일자(2019년 1월 25일)

광어 생존전략, 생산체질 개선과 소비 다변화 절실

■ 생산비 절감형 양식시스템 마련과 보급 필요

- 국내 주력 양식어류인 광어의 산지가격은 생산비를 밑도는 수준의 가격 하락 주기가 최근 들어 찾아지고 있고, 양식경영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따라서 현재 높은 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수한 친어 확보, 수정란 관리 등 우량 종자 개발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며, 원가비중을 체계적으로 낮추기 위해 고비용의 생산구조를 체계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함
- 현재 소규모의 영세한 국내 양식업의 경우 비용 절감과 대체 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대안으로 스마트양식 도입이 요구됨. 스마트양식은 4차 산업 혁명 기술(ICT, AI 등)을 활용한 규모화·자동화·첨단화 그리고 친환경 양식을 실현한 지역 밀착형 산업으로서, 국내 양식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금년부터 정부에서는 향후 10년간 국가차원의 스마트양식 기술의 실증보급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그러나 현재 국내 광어 양식업에 도입된 첨단양식은 일부 기술에 국한되며, 정부차원의 스마트양식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광어는 국내 어류 양식의 대표 주자이자, 생산량 또한 가장 많아 앞으로 경비절감과 양식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스마트양식 확대와 보급이 절실함

■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

- 최근 광어 소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⁸⁾에서도 크게 줄고 있음.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일본 내 광어 소비의 감소 요인 중 하나가 광어의 안전성 문제임. 광어 수출은 내수와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수급조절과 가격 견인을 위한 중요한 도구임

8) 일본 광어 총 공급량(2015년 기준)은 1만 3,431톤으로 10년 전 대비 14.9% 감소했음. 2015년 일본의 자연산 광어 생산량은 10년 전보다 7% 증가했으나, 양식산은 44.8% 감소한 2,545톤이었음. 한편 한국산 수입량 역시 37.2% 감소한 2,371톤에 불과했음

-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광어 수출량은 3,000톤 이하로 줄었고 2018년에는 2,475톤까지 감소했음. 여기에 순수 대일 수출량은 이보다 훨씬 적은 1,793톤에 불과해 2005년 전량 대일 수출되던 5,574톤의 3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임
- 이제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광어의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대책 등이 검토되어야 함.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2년 배합사료 의무화에 발맞춰 안전한 광어 양식을 위한 기준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생산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본 제도가 정착될 경우 소비자 신뢰성 확보는 물론 안전성 문제를 다소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임

■ ‘활어’에서 탈피한 시장 세분화 시급

- 광어는 가자미목(目) 넙치과(科)에 해당되는데, 특히 가자미류는 세계적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다양한 형태로 소비되고 있음. 따라서 연중 안정 공급과 제품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식 기술에 대한 투자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중 한 곳임
-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광어를 횃감용 활어로 공급해 고부가가치 창출에 일조해 왔음. 그러나 현재와 같은 소비패턴으로는 광어시장이 축소될 여지가 높고, 이제까지 누렸던 ‘활어’에 대한 프리미엄 수요를 더 이상 담보할 수 없음
- 최근 국민 식탁에 자주 등장하는 ‘연어’는 주로 활어가 아닌 선어⁹⁾임. 이들은 보관이 용이하고, 조리가 손쉬워 다양한 요리 연출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음. 따라서 광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활(活)어’에서 벗어난 시장 세분화가 절실함
- 고가의 대(大)광어 프리미엄 시장 고수와 동시에 광어의 참맛을 널리 알림으로써 두터운 소비층 확보에 주력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고비용의 생산시스템에서 벗어나 스마트 양식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방안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

■ 다양한 제품개발 및 맞춤형 홍보 전략 마련

- 해마다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최근 소비 주도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음. 이들을 위한 ‘혼밥’, ‘혼술’ 등 다양한 소비문화가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요식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음. 그러나 광어는 보통 4인 기준의 ‘광어 한마리’로 소비되고 있어 최근 소비트렌드 변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
- 소비자들은 연어가 고급스러우면서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고, 활어보다 위생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한편 최근 대형마트에서는 활어보다 선어 취급이 늘고 있으며, 단순 ‘회’보다 제철 수산물 또는 숙회 등과 같은 다양한 아이템 발굴을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에 노력 중임

9) 회 소비행태 조사결과(2017년), 선호하는 선어회 종류는 연어가 5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참치(32.8%), 광어(22.1%) 순이었음

- 따라서 대부분 활어로 소비되는 광어도 이제는 소비자니즈에 맞춘 맞춤형 제품개발이 절실히 요구됨. 예를 들어 소포장과 간편식이 겸비된 1인용 포장회, 회덮밥, 초밥, 물회는 물론 광어 카르파치오, 파스타, 스테이크, 돈까스, 어묵 등 다양한 변신이 필요할 때임
- 한편 광어 소비는 결국 소비자의 최종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알리는 일’ 또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함. 특히 스마트 시대에 맞춘 홍보 방법이 중요한데, 기존 신문과 단순 TV광고가 아닌 SNS, 드라마, TV 프로그램 내 PPL(Product Placement Advertisement) 등을 통해 다양한 식재료로 광어가 활용되는 사례¹⁰⁾들을 연출해 나가야 함
- 또한 좋은 홍보 전략으로써 ‘지역마케팅’ 강화를 제언하고자 함. 제주지역은 연간 1,500만 명이 찾는 국내 유명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의 광어 소비는 매우 적은 편임. 현재 제주 대표 수산물인 ‘갈치’와 ‘옥돔’이 꼽히며, 도내 소비는 물론 공항과 여객선 터미널에서 관광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음. ‘제주자리돔’은 축제 개최와 제주 내 400~500곳의 음식점에서 소비되고 있음
- 만약 생산량의 10~20% 만이라도 관광객과 도민에게 제공된다면 광어 소비 활성화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제주지역이 전국 제1의 광어 산지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하며, 제주 광어 알리기에 힘써야 함

10) 일본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에서 방영된 한류 드라마 중 식사 시 미역국 먹는 장면이 잦아 소비자들이 한국 미역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미역 소비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함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양식산업,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병!,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회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질,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노동법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회의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물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물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2018.10.31.
제102호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업계,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보다 적극 대비해야	2018.11.07.

구분	제목	발간일
제103호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	2018.12.12.
제104호	우리나라 극지진출 40년, 미래 30년을 위한 극지 비전 수립 - ‘2018 북극협력주간’ 성공적 개최와 세계최초 ‘2050년 극지비전’ 선포	2018.12.19.
제105호	블록체인인의 확산과 해운물류분야의 대응	2019.01.02.
제106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2019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2019.01.18.
제107호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시행 대비 해운부문 체계적 대응 필요	2019.01.30.

URL: <https://www.kmi.re.kr/>